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도대체 들려오는 소식마다 ‘살이 떨림’ 지경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나는 어떤...

문에서 얻은 이명박 후보의 실질 득표율은 30.7%라고 한다. 아마도 기권한 사람들 가운데는 대선과정 자체에 환멸을...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다. 이들이 속으로 사이고 있을 분노와 절망, 그리고 그 가슴에 든 멍을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 고뇌할 때다. 완장 차고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랍 해명하는 사람이 없다. 동영상에서 말한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단순히 뻔뻔하게 해서 말한 것인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어물쩍 그냥 넘어가고 있다.

교수신문에서 2007년 한국의 사자성어로 ‘자기기인’(自欺欺人)을 선정했다고 한다. 이 말은 누구보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유의 건물관리인으로 위장취업 시키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남의 회사를 내가 설립한 회사라고 말하다가도 불리하면 나와 어천가만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리의 의식과 제도와 관행을 전진시켜 나가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 살리기는 ‘급한 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도자의 정령에 의한 국민통합은 이미 물 건너갔다. 개혁은 지도자의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선거의 결과가 진실과 거짓을 바꿔놓을 수 없으며, 잘못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 당선인이 BBK 등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그 동안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것이 야말로 참된 용기요, 공인(公人)의 자세인 것이다. 우리는 잘못이 없는 지도자보다,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보고 싶다.

논어(論語) 자장(子張)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군자의 잘못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그 잘못은 사람들이 모두 보고,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다 우러러본다.”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호남운하 국비·민자투자 병행돼야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던 호남운하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8일 ‘호남·충청운하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건의한 ‘영산강 프로젝트’ 사업비는 무려 8조5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호남운하 건설이 100% 민자사업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충분한 경제성 검토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자에만 의존하겠다는 것은 호남운하 건설 역설을 민간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당선인 측은 호남운하의 민자 전환 방침 배경에 대해 경제성을 들었다. 호남지역 개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호남운하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산강에서 금강까지 200km에 이르는 폭 75m, 수심 6.1m의 호남운하는 순공사비 1조5천억원, 수질개선사업비 2조2천억원 등 4조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호남운하 건설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이다. 호남운하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성 검토가 이뤄진 뒤 국비와 민자 투자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절대 서둘러선 안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출자총액 제한제에 이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 또는 완화를 적극 검토하면서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광주·전남을 비롯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경제계, 사회단체 등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는 기업이 얼마나 되었는가. 인수위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은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국가균형발전정책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파장은 심각하다. 벌써부터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공장을 짓기로 했던 6개 기업 가운데 2곳이 설립을 포기하고 나머지 4곳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인수위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법인세 감면과 같은 혜택으로는 대기업의 지방 이전은 요원하다. 인수위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기업 유치에 경쟁우리가 도입되면 지방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수도권의 각종 규제가 풀리는데 지방으로 이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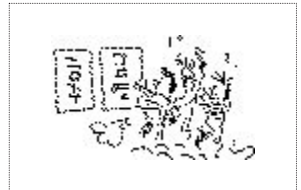
당장 시급한 것은 지방의 활성화 방안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심화되어서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 각종 규제부터 과감히 풀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을 살린 뒤 검토해도 늦지 않다.

無等鼓

조선 22대 왕 정조가 격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즐겨 피웠다던 담배는 현대 경제학 서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재화 중 하나다. 수요와 가격이라는 경제원리를 설명하는 소재로 동원된다.

생활이 팍팍해지면서 술 소비도 늘고 있다. 지난 한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주 33억1천950병(360ml 기준)을 마셨다. 1인당 96병을 마신 꼴이다. 맥주는 1인당 86병(500ml)에 달했고 위스키 소비도 크게 늘었다. 청소년·여성들의 흡연과 음주가 늘어난 요인이 있지만 역시 경제 탓이다.

경제와 술·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논할 때 관련 담배는 탄력적인가 또는 비탄력적인가, 즉 가격변화에 수요가 민감하게 변하는가를 따져보는데 활용되는데, 다 아는 바지만 결론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비탄력적 재화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와 술을 끊기 위해 연초 금연이나 금주를 결심했다 실패한 참피만 당한 40~50대 가장들은 두 가지 재화가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러면 자신은 물론 국민들도 건강해지고, 국가적 보건·사회비용도 절감되고, 노동력은 더욱 양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조세연구원은 담배 가격이 100원 인상되면 흡연율은 0.41%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가격이 흡연율에 영향을 주고는 있다. 하지만, 500원이 올랐다고 흡연율이 산술적으로 계산된 2%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치 않다. 담배·술 공장은 멈춰야 하고 병원 안가면 제약회사, 의사를 먹고 살 것이 없다. 수명 길어지면 국가는 노령연금 부담만 커진다. 경제란 그런 것. 되지도 않은 금연·금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는 게 나을 것 같다. /기현호 경제부장 kihh@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3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흡연율은 가격이 상관 없이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흡연량은 1천912개비에 이르고 있으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NGO 칼럼

구성모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는 ‘부자(富者)로 죽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것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부자’가 많은 나라 미국, 오늘 날 미국의 국력은 단순히 GNP나 부존 자원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 것이다. 국민 1인당 연 70만원이 넘는 기부, 생활 속에 녹아있는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 전체적으로 항상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 때문에 ‘강대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지도 모른다.

음속 한 귀퉁이에 남아 있는 상처로 인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신약성서에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했듯이 ‘부’라는 것은 어떻게 모으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동안 마음의 부자들로부터 성금을 받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왔다.

몇몇한 부자가 많은 나라

각 계층간 빈부격차가 커져, 국민들간 위화감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부자는 많지만 ‘뜻뜻하게’ 부를 축적해 사회로 환원 사람이 드문, 아직 상속된 문화를 갖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고사리 손으로 모은 돼지 저금통을 성금으로 전해 준 월곡의 정가은·지은 자매,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을 사탕관에 하나 가득 모아 톨게이트 모금함에 넣어주던 트럭기사, 이름도 밝히지 않고 3천만원의 현금다발을 두고 사라진 40대 남성, 소아암과 백혈병 아동들의 치료비에 1억2천만원이 넘는 돈을 선행 내놓은 문근영양과 그녀의 나눔 바이러스에 걸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용돈을 모으는 팽글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등 우리사회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모여 따뜻한 사랑의 물결기를 이루었다.

뜻뜻하게 반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 차례로 줄서기보다는 갖은 권모술수로 새끼기하는 자가 앞서는 나라, 힘의 중심에 빌붙어 잇속을 챙기는 자가 벼락 부자가 되는 나라, 이런 나라는 미래와 희망이 없는 나라이며, 필경 사람들 마

우리가 그래도 희망적일 수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뜻뜻하고 당당한 부자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 주임>

높은 시민의식은 정당한 신고정신에서 나온다

지금은 휴대전화도 있고 해서 예전보다 시민의식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경찰서 왔다갔다 하기 싫어서’, ‘내 일 아니니까’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상을 주는 제도까지 만들어져 곳곳에서 파라치들이 활개치는 기현상까지 나타났다.

단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친구가 자리를 뜬 지 15분 만에 출동한 경찰은 “어린 아이를 흘로 방치했다”며 친구를 연행한 것이다.

얼마 전 독일에서 겪은 일이다. 친구가 두 살배기 딸을 차 안에 남겨두고 잠시 슈퍼마켓에 물건을 차려 들어갔다 경찰서 신세를 졌다. 그 이유는 어떤 아홉살짜리 아이 혼자 차 안에 있는 것을 보고는 위험하다고 판

친구는 독일인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끔찍할 정도로 중요시한다는 사실과 남의 일이라도 잘못된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신고의식을 알고는 뒤늦게 이해하게 됐다.

철저한 어린이 보호주의, 정당한 신고정신, 우리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파과라치 제도가 아닌 진정한 신고정신을 배웠으면 한다. ▲김계현·광주시 광산구 등립동

며칠 전 퇴근길에 전철을 타려고 할 때였다. 열차가 멈춰선 뒤 열차 안으로 들어가 앉으려는데 순간 바깥에서 “빨리 뛰어 가서 우산을 문에 걸러 넣어”라는 한 아홉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게 올라왔다. 아홉살의 아들이 대견스러웠는지 손을 잡고 앉으며 씨익 웃었다. 작년으로 기억되는데 전동차에 아가를 실은 유모차가 끼여서 끌려간 적이 있었다. 만약 전동차의 센서가 고장나서 그 아이의 팔뚝을 문 채 그냥 갔더라면 이는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다. 아이는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다음에 또 할 것이다.

소리나는 쪽으로 돌아봤더니 초등학교 3~4학년 쯤 꽤 보이는 남자 아이가 후다닥 뛰어와서는 막 달리는 전동차 문에 정말 우산을 꼭 끼워넣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초등학교생이 우산을 갖다 물린다는 것이 그만 너무 깊이 찢려 넣는 바람에 전동차 문에 물린 것은 우산이 아니라 학생의 팔뚝이었다.

어른들의 무질서와 안전불감증이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뺏아갈 수도 있다. 안전불감증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키워져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자.

전동차 문은 무안전가 걸리자 닫히지 않고 다시 열렸고 뒤를 이어 그 아홉살짜리 애사

▲이금숙·광주시 서구 농성2동

Advertisement for 'Wildlife' (야생) featuring a tiger and raccoons. Text includes 'Wildlife' and 'Wildlife'.

Advertisement for 'Wildlife' (야생) featuring a tiger and raccoons. Text includes 'Wildlife' and 'Wildlife'.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光州日報)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